

## 2013년 북한 신년사 평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Online Series CO 13-0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3년 1월 1일 오전 방송을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육성 신년사 발표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던 해인 1994년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및 청년전위를 통해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해왔다. 육성 신년사 발표는 권력승계 이후 김일성을 모방하며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 한 ‘김정은식 통치행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2012년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기념한 열병식 연설을 포함해 김정은의 다섯 차례 연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의 연설이 기적과 혁신을 창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김정은이 2013년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할 것임을 암시했다.

올해 신년사는 새해 인사에 이어 지난해의 업적을 짧게 평가하고 올해의 과제를 길게 제시하는 순으로 구성되었다. 신년사는 2012년을 김일성·김정일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역사적인 해”로 규정하고, 지난 해 김정일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역사적 승리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신년사는 2012년의 구체적인 성과로 다음을 들었다: ① 과학기술 발전, ② 현대적 군사장비 보유, ③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인민 생활향상 진전, ④ 인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⑤ 사회주의 교육제도 강화.

신년사는 2013년을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 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 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강조했다. 신년사는 2013년이 북한정권 수립 65돌이자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임을 상기하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을 위해 금년에 달성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다음 순서대로 제시했다: ① 경제, ② 정치, ③ 군사, ④ 사회·문화, ⑤ 대남, ⑥ 대외.

올해 신년사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경제 분야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 강화, ‘인민경제계획’의 엄수,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 등과 같은 보수적 색채의 용어 사용이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정책의 보수적인 기초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한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왔던 경공업과 농업 부문의 과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 다음에 제시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생산력 증대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인민생활 향상에 비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가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함과 동시에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역설한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입각한 경제강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년사에서 올해의 투쟁구호를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로 설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은하 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을 2013년 대내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치 분야에서는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육성 연설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인민 친화적’이었던 김일성을 모방하면서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신년사는 예년에 비해 분량이 짧아진 것도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되고 거창한 문장형식은 완화되었지만, 목표 제시의 추상성이 높아져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진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년사는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내결속을 위한 정치사상적 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군사 분야에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선군정치를 중시하던 분위기는 약화되었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빈도를 높임으로써 당이 전면에 나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허황된 구호에 초점을 맞추어 온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좀 더 실용적인 논조가 사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신년사는 금년이 김일성이 ‘일당백’ 구호를 제시한 지 50돌이 되는 해라면서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싸움준비 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공업부문에서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영철 총참모장도 2012년 12월 29일 김정은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

다면서 “국방공업 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넷째,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분발을 독려했다.

다섯째, 대남 분야에서 남북 간의 ‘대결상태 해소’를 명분으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제시했다. 이는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정부 투쟁선동과는 다른 방향이다. 2013년 신년사는 2010년과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각각 “북남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거나 “대화화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나타난 유화기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대외 분야에서 신년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이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당분간 동아시아 정세흐름을 관망하면서 ‘자주, 평화, 친선’ 대외이념으로 포장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년사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2012), 한반도 비핵화(2011), 조·미 적대관계 종식(2010), 한반도 평화체제(2010) 등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했던 중·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교체된 동아시아 4개국(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새로이 수립하게 될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대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분간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서 김정은의 군 장악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자발적인 충성 유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군사동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내 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에서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를 언급한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13년 상반기 중에 3차 핵실험이나 6차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북한은 당국대화 재개 및 통일전선 투쟁의 양면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대화 對 대결’ 혹은 ‘전쟁 對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활용하여 남한 여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 정부는 이에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올해 평화협정 체결을 공론화하면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현재의 한반도 안보구도에 질적인 변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걸지는 않았지만 ‘침략과 전쟁책동 배격’을 주장하면서 그 근원적 해결책으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치공세를 강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북한 신년사는 김정은 체제의 군부 통제력 강화와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 성공 등에 힘입어 정책 전반에서 공세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① 정부 차원의 북한상황 관리 및 당국대화 모색, ②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북한의 군사도발 억지, ③ 당국 간 대화 분위기 속에서 남남갈등과 같은 국론 분열 방지, ④ 주변국과의 공조(북한의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 강화 등)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북한 관리.

새 정부는 당국 간 대화재개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활성화, 인도적 지원 확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의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남북합의에 담긴 정신을 존중하되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국회동의가 필요한 부분 등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기존 합의를 존중하되 필요한 부분은 조정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과 신년사에서와 같이 ‘6·15,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2013년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북한은 새로이 출범하는 한·일·중·러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2기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판 회심의 카드인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차 핵실험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핵탄두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단 발이 아니라 두 발이 순차적으로 터지는 연속 실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야기할 안보위험의 높은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미국의 정책이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추가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기존의 핵능력을 인정해주는 소위 ‘비확산’(Non-proliferation)으로 기울지 않도록 국제적 차원의 외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